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44호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사랑과 나눔 활동 계속 이어가

인터뷰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2012. **6**

CONTENTS

2012년 6월. 제144호



03



04



13

이달의 주요뉴스
03 언론중재위원회
사랑과 나눔 활동 계속 이어가

인터뷰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04 “억울함이 없는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단상
06 댄서의 순정

직원마당
07 중국의 역사 키우기

언론분쟁 경험기
08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했던 탈북자 기사

판례토록
10 유명인의 주변 인물이면 덩달아 유명인?

이용재의 잡문 노트
11 헤밍웨이의 칵테일, 모히토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위원회 통계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랑과 나눔 활동 계속 이어가



▲ 우측에서 다섯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그 좌측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올초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단을 출범하고, 법률적 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무료변론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단(단장 권성 위원장)은 지난 2월 구세군영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 도서 및 책장을 기증하고, 4월 불암산 등산로 일대에서 환경정화운동을 펼친 데 이어 5월 10일에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을 방문해 의류 200여 점과 쌀 30포대를 기증했다.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권오근 운영본부장과 사회공헌단 단원들은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창인원의 설립배경, 운영현황, 재정문제 등에 관한 간담을 나눈 후 교육시설, 의무실, 물리치료실 등의 보호시설을 둘러보았다.

권성 위원장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창인원의 뜻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지속적 교류를 통해 지원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공헌단은 앞으로도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저소득층 지원활동, 성금기부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법원 대법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새롭게 탄생했다. 이후 고충민원처리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권익을 수호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종합적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1월 취임 이후 국민권익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났다.

Q. 권익위가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의 권익위를 통합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과거 3개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던 것과 비교하여 가장 발전된 부분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게 된 점입니다. 위원회 출범 전인 2007년에는 3개 기관의 직원 수가 542명으로 48,76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지만, 통합 후 4년이 지난 2011년에는 476명으로 61,005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통합 후에 인원 대비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원인은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공유하였기 때문이며,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된 것 외에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민원처리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국민신문고는 민원수령에 있어 국내 최고의 행정포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민신문고의 우수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법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닉네임 안에 국민신문고의 우수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법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하며, 민원 외에도 제안, 각종 신고, 정책토론 등 모든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간편하게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신문고 구축 후 처리가 어려운 다부처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은 약 40% 정도 단축되었고, 일반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원처리 만족률이 높아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

렴된 국민의견은 정책수립, 입법, 제도개선 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Q. 권익위가 부패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로 올해 ‘UN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연내 제정을 목표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는 연고주의가 아직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아는 사람이 없으면 차별을 받는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절차를 오픈시켜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직무권한 범위 내의 사람에게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며,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 내용을 ‘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나 제공한 사람 모두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얼마 전 권익위가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나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갈등해결과정에서 대체적분쟁해결기법(ADR)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ADR 기법은 권익위가 집단갈등민원을 해결하는 보편적 방식 중의 하나이고, 갈등당사자의 수용성도 높습니다. 다음으로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해결과정을 통해 갈등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조정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갈등조정전문가를 육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조정자가 공평무사하다

는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중간결론을 내리고 당사자가 스스로 최종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아이디어 발굴, 다양한 ADR 기법 적용, 이동신문고와 현장 조정회의와 같은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언론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이 가져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언론의 잘못된 기사는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소송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사를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언론은 취재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여 국민이 숙지하도록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즉, 언론은 피상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이나 시정권고 등 비강제적인 해결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기관 모두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업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높은 신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



김창희 위원
전북중재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댄서의 순정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 심리를 다음 화요일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나의 일정이 어떠한지 묻는 소장님의 전화를 받고 목요일이 좋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매주 화요일 날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다. 댄스 수업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댄스스포츠를 시작한지 10년째다. 나는 부부전문반에 속해 있어 아내와 항상 같이 한다. 2003년 처음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로 댄스를 시작할 당시에, 나도 춤이 무엇인지 조금은 안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왜냐하면 1997년 일 년간 안식년으로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생활할 때, 머리가 허연 주임교수가 춤을 춘다고 하여 우리 부부도 6개월 정도 등록해서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 그때 그 교수님이 지금의 내 나이 정도였던 것 같다.

그런데 댄스스포츠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몸치인지는 몰랐다. 항상 스텝이 엉키다 보니 머리는 숙여 다리를 쳐다보고 팔은 계속 내려가 주의에 주의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잘 할 수 있겠지 했지만, 몸치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만 해주었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 동안 토요일 싱글반에서 청강하는 열성도 보였다. 10년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다. 보통 부부들이 댄스를 시작하면 1년 정도하고, 2년이면 아주 길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도 몇 개 팀에서 살아(?) 남은 부부들이 합하여 한 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조기에 춤을 그만두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많은 경우 부부끼리 서로 잘한다고 우겨서이다. 댄스와 이혼하는 이유는 '성격차이'가 아닌 '실력차이'인 것 같다. 나도 계속해서 가르치려는 아내 때문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

우리는 부부반이기 때문에 부르스와 지터백은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롬바, 차차, 자이브, 왈츠, 탱고, 썸바, 비엔나왈츠, 퀵스텝, 파소드브레라는 종목을 경험했다. 물론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열심히든 한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성격은 매우 밝다. 두 시간 정도 춤을 추고 나면 충분한 운동도 되고 정말로 기분도 좋아진다.

지금도 춤 실력은 형편없지만, 자신있게 취미가 댄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해, 김교수! 아주 도사 댔겠네"라고 하지만, 웬 도사! 정말로 조금은 창피한 생각이 든다. 댄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대로 골반으로 음악을 들으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할 것 같다. 모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댄싱 위드 더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요즈음은 시즌 2에 들어갔다. 그것을 볼 때면 나는 언제 저렇게 잘 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도 춤춘다'라고 외치고 싶다.



돌이켜보면 닭살이 돋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007년 여름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일정 중 하루 크루즈선을 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날 밤 갑판에서 우리 부부는 흘러나오는 음악에 스텝을 밟았다. 동양인 둘이서 춤을 추는데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박수와 환호를 보내 주었다. 지금도 그것을 떠올리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나지만, 그래도 크루즈 선상에서 단독 공연(?)해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댄스스포츠를 권하고 싶다. 정년을 마치고 크루즈선 여행을 할 기회가 오면 정말로 멋있게 아내와 한판 추고 싶은 것이 '댄서의 순정'이다. 



중국의 역사 키우기



권 오 군
운영본부 본부장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연일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의 이목도 이곳에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통치 이념과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소수민족의 주장을 묵살하는 한편 교과서 왜곡과 연구 작업으로 역사 왜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역사관은 중국 문명이 황하강 유역에서 발원하여 그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중원 외 지역은동이, 서융, 남만, 북적과 같은 오랑캐가 다스리는 나라로 문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낙후된 지역으로 여겼다. 이른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발달한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중화사상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으로 대체되고 있다. 중국 문명이란 과거 황하 지역에 황하 문명 못지않은 작은 문명권들이 있었고 중국이 이들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면서 하나의 중국 문명을 이루어 냈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중국이 소수민족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포용한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20세기 중반 들어 중국 고학이 발전된 연구 성과를 보이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의 역사가 황하 지역의 것과 유사하거나 앞선 경우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론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중국이 고대부터 다민족 국가였음을 강조하여 한족을 비롯해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현대의 중국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고대사 부분을 삭제하고 고구려를 중국 변방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으로 축소하여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

였다.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학계의 비난에 대해서는 동북공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나 학자들의 소관이라는 웅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동북공정은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고 애국주의를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중국 정부의 승인과 재정 지원 하에 이뤄지는 중국 동부 지역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전한 때 중국의 현도군 고구려현 내에 변방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며 중국의 중앙 정부와 계속해서 신속(臣屬)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당나라의 고구려 침입은 타 민족에 대한 침략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통일 과정이라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남북한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 작업이라 한다. 즉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면서 간도 문제나 한반도 통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영토, 국경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이며, 통일이 조선족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 왜곡에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방관해서는 더욱 위험하다. 동북공정은 단순히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 제반에 걸쳐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정치, 경제, 문화, 학술을 포함한 총체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러 다른 현안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뿌리를 찾고 상고사를 입증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를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학자들이나 학계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의 역사 인식을 정립하고 중국 학생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과 논리를 하루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했던 탈북자 기사



선우정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선의(善意)로 쓴 기사를 상대방이 악의(惡意)로 받아들일 때, 기자로서 가장 곤혹스럽다. 지난 4월 초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탈북 여성 기사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평범한 피플 스토리였다. 북한을 탈출한 여성이 한국 사회의 도움을 받아 가족도 이루고 자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뒤 당사자에게 “회사에 달려가 내 몸에 기름을 끼얹고 확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거친 소리까지 들었다. 그녀는 조정 때에도 비슷한 소리를 했다.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이거 말이 안 통하겠구나’ 싶어 가급적 무대응으로 조정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중재위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렬 직전에 합의를 이뤘다.

정정과 배상까지 수용한 합의였으니 회사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리 없지만, 탈북자 보도와 관련해 꽤 의미가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다. 이 사례에 대한 언론 중재를 계기로 “탈북 기사를 다룰 때 인권 문제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간부회의의 지시도 있었다.

문제의 기사는 중국에서의 탈북자 복송 문제가 한창 이슈로 제기될 때 게재됐다. 메인 기사는 아니었고, 좀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현장·정책·인물’이라는 지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 집어넣은 박스 기사에 해당했다. 지면 성격상 선정적일 필요도 없었고, 눈물 속 빠는 대감동의 스토리일 필요도 없었다. 그저 적당한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기사는 대단히 구체적이었다. 담당 경찰을 취재하고 탈북 여성을 장시간 인터뷰해서 그녀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탈북 여성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 역정은 기자가 원하는 것이 상으로 구체적으로 말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만 밝혀지지 않는다면 스토리는 게재해도 좋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게재 사진을 뒷모습으로 하고, 뒷모습 사진조차 흐리게 처리했다. 실제로 사진만 보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문제는 사연에 있었다. 탈북 여성의 고향, 아버지 직업, 탈출 경로, 중국 내 거주지역이 기사에 명시된 것이다. 그녀를 아는 사람이 기사를 읽으면 대부분 기사의 주인공이 그녀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살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라며 적시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담당 기자에 따르면 그녀가 인터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경찰도 그렇게 확인했지만, 기사가 나간 뒤 그녀는 내용을 부인했다.

여기서 시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설사 그녀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언론의 온당한 처사인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의 신원을 100% 감출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고 해도 같은 의문은 남는다. 북한 폭력 정권의 문제, 정권 부정부패 문제라면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집단에 속하는 탈북 여성에 대한 기사라면 아주 작은 선정성이라도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최대한의 배

려가 필요한 기사를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오직 기사의 압축도와 농도만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 아닐까. 이런 반성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 탈북 여성의 고향, 아버지 직업, 탈출 경로, 중국 내 거주지역을 모두 거짓말로 쓴다면 기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 ‘A씨는 B 일을 하는 C씨의 N번째 아이로 태어나’ 라고 쓴다면, 이게 대체 무슨 기사인가.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뿐이고, 기사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최대한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기술적인 방법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업 자체가 탈북자 기사를 위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담당 기자와 출고한 데스크에 주문한 내용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탈북자 기사는 많은 팩트를 넣으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 감동적 사례를 무리하게 쓰려고 할 필요도 없다. 구색 맞추는 정도만 쓴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욕하지 않는다.” 데스크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현장 기자들은 탈북자 근처에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다.

탈북자 기사는 읽는 사람이 많아서 쓰는 것은 아니다. 취재원에게 배울 게 많아서 기자가 달려드는 것도 아니다. 신문이 지향하는 노선에 탈북자 문제가 하나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 문제에 특별한 애정이나 의지를 갖지 않으면 담당기자로서 버티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언론의 의도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탈북자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문제를 다루는 기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나아말로 중재위에서 2시간 이상 그녀와 함께하면서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그녀의 분노와 하소연에 빨리 자리를 떠나 사무실에 복귀하고 싶었다. 중재위는 그녀에게 변호사의 무료변론을 제공했고 필자도 중재에 임하기 전에 회사 변호사와 상의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왔지만, ‘빨리 결렬됐으면’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다. 나도, 상대 측 변호사도 주로 그녀의 말만 듣고 있는 가운데, 합의를 이루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중재위 담당자였다. 탈북 여성을 설득하기 위해 예상 합의문을 몇 차례 작성해 보여주고, 배상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그녀를 달랬다. 설득 시간만 1시간 30분 이상 걸렸다. 대단한 내공이었다.

‘정정보도문과 300만원 배상’이라는 중재위 권고를 회사에 제시했을 땐, 물론 절대로 유쾌하지 않았다. 싸게 막은 것인지, 비싸게 막은 것인지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본 일도 없다. 이번에 배운 것을 충분히 업무에 적용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이런 의심도 든다. 혹시 내가 사회부를 떠난 뒤 후임 데스크가 똑같은 탈북자 기사로 또 몇 백만원짜리 청구서를 중재위에서 들고 오는 것은 아닐까? 하루 수백 건의 기사가 기계적으로 확확 출고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다. 탈북자 기사도 ‘자살 보도’의 경우처럼 무언가 정형화된 가이드라인과 준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느낀다.



BOOK 이달의 책

루머 : 인터넷시대에 던지는 新문명비판

캐스 선스타인 지음 | 프리뷰 | 192페이지



서문에서는 이 책의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왜 사람들은 황당한 거짓 루머를 받아들일까. 둘째, 범람하는 거짓 루머의 악영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거짓루머가 인터넷과 결합했을 때의 파급력과 폭발력에 주목하면서, 각종 루머가 생겨나고 전파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설명을 담고 있다.

저자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거짓 루머에 대한 믿음이 자리잡고 나면 사실을 가지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면서, 파괴적인 거짓 루머를 유포하는 자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축효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상에서는 사람들이 ‘통보해서 삭제시킬 권리’를 갖도록 하며, 손해배상 인용 한도를 정하고 조정을 통해 억제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루머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위축효과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잡아가는 일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명인의 주변 인물이면 덩달아 유명인?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아는 후배가 군 복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그는 비보이였고 대학 전공은 수학이다. 특이한 이력 덕분에 후배는 기사에도 몇 번 실리더니 이 바닷(?)에서 나름 유명인이 됐다. 이런 그가 이번에는 자서전을 낸다.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다. 자서전에 ‘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명인의 주변에 있다가 덩달아 유명세를 치르는 경우가 있다. 자서전에 이름이 올라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단지 유명인의 배우자 혹은 연인이라는 이유로 기사화되기도 한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당사자는 그저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

작년 5월 10일, 모 재벌 정 부회장이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에 앞서 4월 20일에는 상견례가 있었다. 이 상견례 장면을 한 인터넷신문에서 단독 보도했다. <정OO·한OO, 극비 상견례 포착 ... OOO 로얄패밀리 총출동> 제하의 기사를 비롯하여 모두 6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기사에서는 상견례 당일 예비신부 한 씨의 옷차림에서부터 신혼집의 위치 및 규모 등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한 씨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 정 부회장과 웃으며 대화 나누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공인인 정 부회장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씨 입장에서 이런 기사는 좀 불쾌했을 것이다. 결국, 정 부회장 측의 제소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1심 법원은 문제의 기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위법성을 판단했다. 먼저 상견례 사실, 결혼계획, 신혼집의 현황, 예비신부에 대한 기본적 정보(성명, 초상, 경력) 등에 관한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 법원은 정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 등에 관한 세부적 묘사, 즉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예비신부의 옷차림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이를 촬영한 사진들에 관해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해당 언론사에 문제된 사진의 삭제 및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이러한 결론이 2심 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유명인의 주변 인물들은 유명인과는 구별해서 취급되었다. 즉, 스타와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그 배우자마저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스타의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종전과는 달리 유명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역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정OO은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은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한OO 역시 원고 정OO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대중적 관심 자체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유명인의 배우자가 누구이며, 그의 이름·초상·학력 등 인적사항 역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본 이 판결이 앞으로 다른 유명인의 주변 인물 관련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다. 만일 이러한 판결이 계속 유지된다면 유명인의 주변 인물이 공개를 감수해야 할 몫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유명인의 배우자 혹은 연인이라고 해서 덩달아 유명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혹시 사람들의 관심이 싫고, 안온한 삶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주변에 유명인은 없는지부터 살펴볼 일이다. 🍷

이용재의 잡문 노트

이용재 (칼럼니스트)

헤밍웨이의 칵테일, 모히토



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의 맛을 궁금하게 여기던 초등학교 5학년은 애주가가 되었다. 여전히 〈노인과 바다〉를 즐겨 읽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소설을 통해 헤밍웨이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술,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칵테일이 있기 때문이다. ‘모히토(Mojito)’가 그것이다.

헤밍웨이가 즐겨 마셨다는 사실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 모히토는 쿠바에서 비롯된 칵테일이다. 하지만 많은 음식이 그러하듯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다만 19세기, 영국의 항해가 및 해군 제독인 프랜시스 드레이크(1540~1596)의 이름을 딴 ‘엘 드레이크(E Drake)’라는 칵테일이 모히토와 비슷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한편 같은 19세기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아프리카 노예들이 마셨던 사탕수수즙 ‘구아라포(Guarapo)’가 원형이라는 이야기 또한 있다.

모히토의 매력은 라임과 박하잎이 자아내는 열대의 향과 청량감이 있다. 연마제 역할을 하는 설탕과 함께 박하잎을 짓이기면 향유가 배어나오고, 설탕과 섞여 모히토의 진수를 만들어 낸다. 이 독특한 과정 때문에 재료를 짓이기는데 쓰는 ‘머들러(muddler)’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덕분에 에스프레소

를 추출하는 ‘탬퍼(tamper)’와 더불어 술이며 커피 문화 애호가들의 수집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칵테일이 그러하듯, 모히토 또한 이론적으로는 만들기 그리 어렵지 않다. 리큐어를 비롯한 재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 국제 바텐더 위원회(IBA, International Bartenders Association)의 공인 레시피에 의하면 럼과 갓 짜낸 라임즙의 비율이 8(40ml):6(30ml)이다. 설탕 두 큰 술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하잎 서너 개, 라임즙을 넣고 으갠 뒤 럼과 소다수를 더하면 된다(참고를 위해 덧붙이자면, 모히토에 쓰는 럼은 짧은 숙성 과정을, 그것도 스테인레스 통에서 거친 백색 럼이다. 참나무로 만든 통에서 주로 오랜 기간 숙성을 시킨 럼은 진한 갈색을 띤다)

이렇게 별 재료도 들지 않고 만드는 과정 또한 간단해 보이지만, 맛있는 모히토, 또는 칵테일을 아마추어가 만들어 내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도 매 해 여름이면 시도해보지만 단 한 번도 만족했던 적이 없다. 서로 다른 술을 섞어야 하는 것은 물론, 온도 또한 잘 맞춰줘야 하므로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섬세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히토의 경우, 박하잎을 지나치게 힘주어 짓이길 경우 풀의 풋내가 쓴맛까지 올라오기 쉽상이다. 역시 제대로 된 칵테일을 맛보고 싶다면 전문가인 바텐더를 찾아가야 한다.

요 몇 해 사이 대중화된 덕분에, 웬만한 바에서는 모히토를 쉽게 맛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맛있는 모히토의 미덕은 균형이다. 원래 리큐어의 비중이 높지 않아 부담 없이 그리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달아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레몬으로도 얼마든지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열대의 청량감을 위해서라면 특유의 달콤한 향을 지니고 있는 라임이 제격이다. 대부분의 칵테일은 바텐더가 판단하기에 최적인 온도로 맞춰 나오므로 가급적 빨리, 5분 안에 마시는 것이 그 정수를 즐기기에 좋다. 🍹



KBS '미디어 비평'과 인터뷰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5월 12일 방영된 KBS 미디어비평("한 줄 기사,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과 인터뷰했다. 손 위원은 소소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어떤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작업과 그런 역할이 오늘날 언론에게 부여된 사명임을 강조했다.

고성신문사에 언론중재제도 강연



송승선 위원(부산중재부, 전 국제신문 편집위원)은 5월 11일 경남 고성신문 회의실에서 고성신문 기자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언론중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잘못된 보도유형, 언론분쟁 관련 사례, 정정보도의 실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국방송학회 '방송시청률조사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



조성호 위원(대구중재부,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4일 한국방송학회에서 주최한 '방송시청률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조 위원은 현재 시청률조사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시청률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검증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비상임이사 선임



류석호 위원(경기중재부, 전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은 5월 23일 출범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약칭 '농정원')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농정원은 기존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이 통합한 정부기관으로 농림수산물 분야에 관한 각종 정보를 관장한다.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발전방안 전문가 포럼' 참석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5월 1일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통일교육 발전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에서 '통일교육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됐다.

한국광고홍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논문 발표



이영원 위원(전북중재부,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11일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관하는 '봄철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개인적 특성이 온라인 구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네트워크 분야의 현황을 분석했다.



중국 상하이대학교 법과대학장 위원회 예방



▲ 왼쪽부터 두 번째 권성 위원장, 세 번째 沈四宝 학장



권성 위원장은 5월 21일 중국 상하이대학교 沈四宝(Shen Sibao) 법과대학 학장의 예방을 받고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중국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沈 학장은 현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재인과 중국 국제경제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대 법학원 및 CIETAC을 방문했다.

신임 중재위원에 신광렬 부장판사 위촉



신광렬 위원은 5월 10일자로 서울제6중재부의 중재부장으로 위촉됐다

신 위원(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4년 10월 12일까지이다.

오광건 사무총장,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생과 간담



오광건 사무총장은 5월 25일 언론피해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사무총장은 학생들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언론중재제도의 실무 등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었으며,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도 중요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블로그에 위원회 소개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청렴한 세상'은 5월 10일자에 <중재는 조화의 또 다른 표현> 제하의 기사로 위원회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주요 조정사례를 통해 위원회 조정·중재의 장점과 위원회의 기능 등을 안내하고, 언론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928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는 조정성립 241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6건(동의 8건, 이의 32건, 계속 6건), 조정불성립결정 131건, 기각 17건, 각하 4건, 취하 393건, 계류 96건이며, 성공률 별로는 조정성공률 60.4%, 본안성공률 7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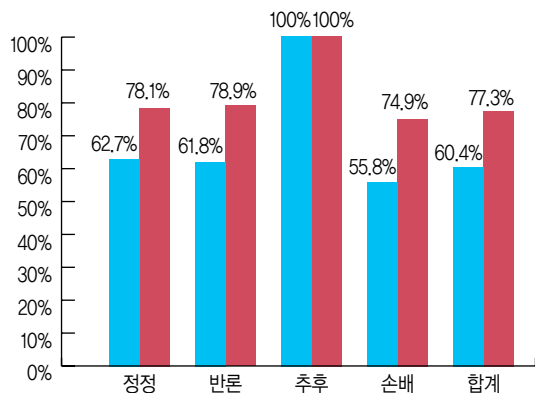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34건, 신문 259건, 인터넷뉴스서비스 202건, 방송 98건, 뉴스통신 30건, 잡지 1건, 기타 4건이었다. 한편, 중재사건은 14건이 접수되어 모두 14건의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기준일자 : 2012. 1. 1. ~ 2012. 5. 20.

청구명	청구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 리 결 과									
			조 정 성 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심리전	심리중	
정 정	466	311	133	3	13	6	68	7	2	90	88	56
반 론	129	90	31	3	2		19	3		30	35	6
추 후	64	2	2							54		8
손 배	269	175	75	2	17		44	7	2	59	37	26
합 계	928	578	241	8	32	6	131	17	4	233	160	96

〈조정 및 본안성공률〉



$$\text{※ 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text{※ 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상담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총 1,168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별로는 조정절차 안내 1,086건, 재상담 예정 200건, 타기관 안내 73건, 법적절차 안내 42건 등이며,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 356건, 인터넷신문 350건, 방송 254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145건, 주간신문 104건, 뉴스통신 60건, 잡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54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언론사 15건, 인턴십 프로그램 12건, 대학 9건, 교육연수기관 8건, 공·사기업 3건, 법무수습교육 2건, 지자체 2건, 기타 3건이다. 법무수습교육은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2주간 진행됐다.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